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외국의 일본연구동향

최근의 일본사 · 일본문화에 관한 외국연구

김용덕(서울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일본자료센터에서는 『외국에서의 일본연구』라는 큰 주제 아래, 1997년 정치부문의 연구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 1998년도에는 역사부문, 그리고 1999년도에는 문화부문에 관한 외국에서의 연구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한국인의 안목에서 외국의 일본연구를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급변하는 일본의 국내외적 상황이 외국에서의 일본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현재 한국의 일본연구 인력이 취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본연구 지역(러시아 및 동구권같은 지역을 제외하고)을 직접 찾아가 현지조사를 한 결과를 묶은 것이 이 보고서이다.

일본사

외국에서 일본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는 대개 두 가지 경우에서 비롯되었다. 그 하나가 일본과 연구자 자신의 나라와의 관계사 또는 비교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지적인 호기심 또는 異國 趣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두 경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관계사나 비교사 같은 주제는 외국의 학자가 일본사 연구분야에서 특수하게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일본사의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이르는 것은 어려운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일본인이 아닌 외국학자들로서 일본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연구도 깊어지면서, 연구주제도 일본사의 본領에 까지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방법상으로도 일본학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현대사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일관된 구조적 접근과 이해보다도 일본역사의 다양한 여러 면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존재가치의 역사적 파악이 눈에 띄는 성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주제만을 갖고 혼자서 연구하기보다는 학제적 공동연구 또는 연구자들간의 국제적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성과의 발표가 많아진 점이 주목된다. 이 중의 대표적인 것이 1999년에 완간된 6권짜리 *Cambridge History of Japan*이다. 참여자로는 오히려 미국의 학자들이 많지만, 주제에 따라서는 일본인 학자를 포함, 많은 외국인 학자들이 같이 참여한 결과가 이 시리즈로 나왔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 축적된 연구결과의 수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외에도 Leiden에서 나오고 있는 *Series on the Japanese Studies* 등이 한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영어권의 일본연구에 관한 학술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세 번째, 아직까지도 외국에서의 일본사 연구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본 실용도에 따라 연구의 열기와 집중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는 않지만, 빨리 극복해야 할 한계이기도 하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나 유럽에서 나타나는 연구 프로젝트의 축

소도 열기의 냉각화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 연구의 대상이 된 지역을 중국·미국·유럽·오스트레일리아로 나누어 간략히 개괄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일관계사나 중국·일본간의 비교사 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 이르러는 순전히 일본문제만 다룬 역사논문이 많아졌고, 그 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천황제에 관한 주제 등이 근대사의 연구가 많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고 있다. 또한 일본역사관계의 국제적인 모임도 자주 열어 (1998년 북경에서만 여섯 번) 연구의 문호를 넓혀가고 있는 것도 최근의 경향으로 주목된다.

미국에서의 최근 동향은 한 마디로 거대이론 즉 큰 대화론 같은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난 이후 주제와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연구의 주제는 아날학과 또는 사회사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무시되거나 간과되어 왔던 대상 — 여성·아웃사이드적 인간들·환경·질병 등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시대가 흐른 탓도 있겠으나 1945년 이후 — 전후사를 주제로 한 연구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실증적 연구능력의 심화나 연구주제의 세분화로 인하여 오히려 이론적인 면이 약화되거나 무시되기도 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중심의 이론이 일반이론으로 증명되기 위한 방증으로서의 일본을 예증하는 차원은 이제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일본이 새롭게 시도되는 여러 이론을 만들어 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다양한 이론의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이나, 후기 구조주의·해체주의·탈근대주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일본역사연구는 원래 언어·문학을 바탕으로 한 위에서 전근대의 사상과 문화 등을 다루는 전통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1973년 유럽일본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의 창립 이후 경제사·정치사·국제관계사 등을 비중있게 다루어 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관계 학과들의 명칭들도 「일본언어·문학」에서 「일본언어·문화」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럽에서 일본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은 압도적으로 서유럽 — 그 중에서도 독일·영

국·프랑스·네덜란드가 중심이고, 대학으로는 독일의 Bochum·Bonn·Berlin, 그리고 영국의 Cambridge·Sheffield·Oxford 등이 3명 이상의 일본사 교수들이 있는 곳이다. 특기할 것은 1988년에 첫 권이 나온 *Cambridge History of Europe* 6권이 1999년에 완간된 일로서, 이는 물론 미국·일본의 학자들이 많이 참여한 것이기는 하지만, Cambridge series가 갖고 있는 학술적 권위가 이만한 국제적 역량을 집약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의 일본사 연구가 축소 내지는 냉각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본경제의 국제적 영향력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아직도 기본학술분야의 하나로서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에 이르러 일본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는 인상을 줄만큼, 기존의 일본연구 — 구조적 단일성이나 모델로서의 일본탐구 등을 적극적으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관계 속에서 일본을 보려는 경향에서이기도 하겠지만, 천황제나 일본의 국가주의 등에 관한 연구가 태평양전쟁에 관한 연구 등과 함께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본사 연구자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공부한 경우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연구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과 함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연구지원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도 연구자들을 자기나라에 정착시키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문화

최근의 국제적인 일본문화연구의 동향을 개관하여 볼 때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첫째가 연구주제의 다양성이다. 이는 연구가 심화되어 가는데 따르는 당연한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일본국내의 연구에 큰 자극을 줄만큼 외국에서의 연구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연구의 내용이 일본학자의 그것에 경쟁적이고 보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둘째는 비교연구의 경향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단순히 과거와 같은 지적 호기심과 취미의 단계를 벗어나, 연구

자가 속해 있는 사회 또는 국가와 연계시켜 보려는 관심의 표현인 것이다. 또는 이제는 어느 한 쪽이 모델이 된다는 이전의 실용적 단계의 연구를 벗어나 순수한 학문적 비교대상으로 일본을 삼고 있기도 하다.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일본문화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Samuel Huntington의 지적 이후 일본을 하나의 문명권으로 취급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일본문화는 분화시켜 보기보다 전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넷째,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국내외적 상황의 반영이 일본문화의 연구에도 보인다. 일본의 경제적 불황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라든가 일본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대한 근원적 의문제기라든가, 일본정치의 혼란에 대한 재검토 논의 등이 그것이다.

일본문화 연구에 대한 대체적인 공통분모 위에 나라별 (또는 지역별) 연구는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첨예한 국제 정치적 경쟁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일본적 특질을 모색하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제의 다양화라든가, 비교연구의 심화 등은 주로 전근대 일본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교육과 가족사회를 중심으로 한 분야가 특히 연구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일본문화 연구는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만큼 기존연구를 벗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까지 대체로 일본사회를 하나의 구조적 성격 하에 파악하려 했던 경향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한 연구로, 또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특정학문분야(discipline)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체적인 문화 자체에 대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조화를 강조하던 일본문화의 특색이 이제는 갈등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사회로 인식하려는 경향, 이에 맞추어 gender에 대한 일본문화의 속성 등을 밝히는 연구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일본문화 연구도 다양성이 라든가 비교연구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곳에서는 그 나라의 특성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

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연구자들의 성향이 좌파적인 데에서부터 순수한 객관성에 치중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만큼 연구주제도 거침이 없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한 때 유행하였던 Japan-bashing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사회와 문화를 이념적인 면에서 비판하는 연구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지역적인 관계에서 '아시아-태평양'에 속해 있다는 인식이 미국과는 다른 일본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영국 내지는 서유럽과의 문화적 근접성을 찾으려는 경향도 있어서 일본을 유럽과 비교하려는 움직임도 흥미있게 관찰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연구자의 숫자나 연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구지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구가 활성화되고 냉각되기도 하는 약점이 있다.

유럽에서의 일본문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도, 1973년 유럽 일본학회의 결성(European Association of Japanese Studies)이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개는 일본에서 맺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일본연구는 압도적으로 서유럽국가들에서 깊이있게 연구되고 있다. 그것은 서양에서의 일본연구의 시작이 서유럽지역에서 일본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비롯하였다는 데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여러 다양성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의 역사적 好惡關係가 다양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서유럽적인 문화전통에서는 일본을 하나의 문명단위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입장에서 통합적인 지역학의 하나로 일본문화 연구를 진행시켜 가고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일본연구자들에 있어서 일본은 아직도 감정적 장벽을 넘기 어려운 연구의 대상으로서, 비교연구의 주제로 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칫 비교연구가 문화의 선후관계라든가 선악판단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문화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수준이 심화되어 갈 때 외국에서의 일본연구를 하는 또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지역과 국가들에서의 연구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의 틀을 세우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한국의 일본연구동향: 사회분야

일본사회연구의 동향

이지원 (서울대)

해방 이래 일본사회에 대한 연구는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한 인접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해외지역연구가 본격화된 것 자체가 최근의 일이긴 하나, 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의 비중은 일본의 정치나 경제 분야의 연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사회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는 지역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며 현실정책적인 면에서도 구체적인 판단의 안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발달은 지체된 것이다. 이러한 지체의 원인은 순수학문적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용적 목적의 직접적 연구수요가 적었다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즉 정치나 경제 분야의 경우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 및 '한일국교수립', 또 '냉전구도'에 따른 협력체제 구축 등의 면에서 일본은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사회 분야의 경우 이러한 정치경제적 요구에 비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촉발받는 정도는 낮을 수

밖에 없었고, 이 점이 지역연구가 착수되기 이전 단계에 일본연구의 흐름이 성장하지 않았던 환경적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960년대 말 이후 일본이 일약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일반적인 '발전(development)'의 관점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현상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사회학의 일반이론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주요사례로 취급하고, 더불어 한국 등의 발전과 비교연구하는 문제의식 등이 나타나면서 일정하게 일본사회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1990년대 들어 일본연구를 '주전공'으로 하는 전문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지역연구의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일본사회연구의 기반이 비로소 형성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표 1〉참조).

여기서는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1) 일본사회 연구자의 분포를 시기적, 양적으로 살펴보고 (2)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주요경향을 추려

〈표 1〉 세대별 학문분야¹⁾

세대 \ 분야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합계
70대	1(1.81)	3(12)		2(2.24)	10(4.21)
60대	5(9.09)	2(8)		15(15.85)	29(12.23)
50대	12(21.81)	1(4)	2(18.18)	14(15.73)	34(14.34)
40대	30(54.54)	16(64)	5(45.45)	31(34.83)	111(46.83)
30대	5(9.09)	3(12)	4(36.36)	26(29.21)	48(20.25)
기타(연령불명)	2(3.63)			1(1.12)	5(2.10)
합계	55(23.20)	25(10.54)	11(4.64)	89(37.55)	237

* () 안은 %. 이 %는 각 학문별 연구자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1) 시대별 분류가 없어 연령별 분류를 참조하였으므로 부분적인 오차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을 추정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사회학의 경우 50~70대의 비중은 낮으며 40대의 비중은 60%가 넘어 압도적이다. 즉 정치학 및 경제학 등에 비해 50대 이상 선행연구자층에서의 일본연구전통이 취약함을 엿볼 수 있으며 문화인류학의 일본 연구와 더불어 사실상 신생분야임을 알 수 있다.

보며 (3) 앞으로의 발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본사회 연구자의 현황

(1) 일본사회연구자의 범위

일본사회 연구자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좁게는 지역연구의 목적의식 아래 현대일본사회연구를 주전공으로 삼는 사회학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이자 연구기관종사자라는 기준에서부터 넓게는 일본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학술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데까지 넓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경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칫 매우 자의적이며 소모적인 것이 되기 쉽다. 따라서 좀 더 세련된 범위설정의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하고, 우선 기준에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²⁾ 우선 이 자료는 우선 일본사회연구자를 박사학위 취득국별, 취득연도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현재 학계에서 활동중인 박사학위취득자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학문상황으로 볼 때 전문연구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정한 경향을 논하기에는 사례의 수가 충분치 못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위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대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

(2) 연구자의 총원현황 및 시기별·나라별·관심정도별 상황

우선 <표 2>에서 나타나듯 학위취득연도별로 보면,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70년까지는 박사학위취득건수가 전무하다. 기본적으로 이는 한국사회 이외의 타 지역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시대적 사정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제(日帝)의 강제점령 경험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 시기의 '반일정책'이 지속된 점, 그 이후에도

<표 2> 시기별 및 나라별 연구자총원상황(박사학위취득기준)

연도 \ 국가	일본	미국	한국	기타	합계
45~65					
66~70					
71~75		1	1		2
76~80					
81~85	1	2			3
86~90	2	2			4
91~95	3				3
96~현재	5	1	1		7
기타 (학위취득연도불명) (학위미취득자)	2 3	1			3 3
합계	16	7	2		25

2) 앞의 <표 1>을 포함하여 여기서는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연구지원센터 (Japanese Documents Center, Gradu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설문조사 「한국의 일본연구 1999」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와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며,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기 이후의 정보는 조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조사시기 이전의 경우에도 설문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응답하지 않은 연구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계자료 및 그에 의거한 분석은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의 용도임을 미리 밝혀둔다.

3) 우선 나라별·시대별 학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통적으로 일본, 특히 문과계통의 경우 전문적인 연구자라 할지라도 근래에 이르기까지 박사학위취득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다. 따라서 박사학위취득건수만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시대 전체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행히 위 통계에는 미취득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해당사례가 존재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취득자로서도 최소한 수 명 이상의 누락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 모두 한국에서의 일본사회연구의 흐름에 큰 변화를 줄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4·19세대’ 및 ‘6·3세대’를 통해 ‘민족자주지향’이 고양된 점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정기간 ‘후진국’의 지위로 떨어졌던 점 등도 연구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전쟁 이후 국제정치·국제관계의 분야에서, 또 1960년대 이후 ‘한일수교’와 ‘경제개발계획’을 계기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정하게 일본이 현실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앞에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실용적 관심이 작용할 여지마저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71년에서 1980년까지의 시기에도 일본사회연구는 미미한 편이었다. 1970년에서 75년 사이에 국내 및 미국에서 각각 1건의 박사학위취득이 있었으나, 현대일본사회연구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례는 아니었고, 관심분야의 하나로서 일본관련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 그 이후의 5년간은 다시 박사학위취득의 면에서 공백을 나타내는 등 이 단계에서는 일본사회연구가 지속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에 들어서면 변화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81년에서 85년 사이에 일본에서 1, 미국에서 2건의 박사학위취득이 있었으며, 각각 일본사회연구를 관심분야, 주전공, 부전공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그러한 표현과는 큰 상관없이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사회 및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성과를 내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1960년대 말 이후 급부상한 일본의 경제적 지위를 배경으로 현실적인 일본사회연구의 필요성이 일정하게 의식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연구로서의 일본사회연구를 준비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시기의 박사학위취득자들은 사회학이라는 분과학문의 틀 위에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자의 수도 점증하면서 비로소 일본연구의 흐름이 지속성을 띠게 된다. 1986년에서 90년 사이에 4명, 91년에서 95년 사이 3명, 96년에서 99년 상반기까지 7명 등 일단 공백없이 일정한 수의 전문연구자가 배출되었다.⁴⁾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인 냉전구도의 해체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향상, 경제발전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세계화’(Globalization)의 요인 등에 힘입어 ‘지역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또한 일본은 여러모로 필수불가결한 연구대상으로 대두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기에 배출된 일본사회연구자들은 개별분과학문의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일본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교육·연구활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주전공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등, 학위취득시기별 관심정도를 분류한 자료는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표 5〉 참조). 나아가 이 시기는 정치학, 경제학 등 인접사회과학분야에서도 일본연구자들이 급증하였고 가능한 한 학제간접근 혹은 협동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지역연구로서의 일본학을 확산시키고 그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는 물론 사회학을 포함하여 여타 개별분과학문 내에서도 일본연구의 관심을 제고하는 피드백 효과를 발휘했으며,⁵⁾ 그 결과 국내에서 일본연구자를 양성하는 기초적인 토양이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학위취득지역별로 보면 일본 13(16)명,⁶⁾ 미국 7명, 국내 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일본취득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취득한 인원만도 전체 13명 중 12명을 기록하고 있고, 1986~90년 2명, 91~95년 3명, 96~99년 5명 등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안정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⁷⁾ 또 수적으로는 물론 연구관심정도별로 보아도 주전공자가 12명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국내 일본사회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4) 조사에서 누락된 연구자를 고려하면 이 숫자는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다.

5) 일례로 한국사회학회 주최 사회학대회의 경우 해외지역연구가 부분사례가 아니라 분과 단위로 조직되어 자리잡은 것도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우선 1994년 후기사회학대회에서 중국사회 연구분과가 조직되어 발표되었고, 1997년 이후에는 해외지역분과라는 이름으로 분과가 만들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지역연구 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일본연구는 그 중 다수를 차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6) 괄호 안 숫자는 조사응답자 중 학위미취득자 포함한 경우임.

7) 역시 적어도 수 명의 누락자 —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 가 있으며 이를 제외한 참고자료상의 수치이다.

〈표 3〉 학위취득지별 관심정도

정도 \ 지역	일본*	미국	한국	기타	합계
주전공	12(11)	3	1		
부전공	1	2			
관심분야	3	2			
기타			1		
합계	17	7	2		25

* 학위미취득자도 포함하여 집계함.

〈표 4〉 학위취득지별·연령별 통계(1999년 현재)

연령 \ 지역	일본	미국	한국	기타	합계
70대 (미취득자)			1		1
60대	1	1			2
50대	1				1
40대	11	5			16
30대	1	1	1		3
기타(연령불명)					
합계	14	7	2		

〈표 5〉 학위취득시기별 관심정도

연도 \ 지역	주전공	부전공	관심분야	기타	합계
1945~65	(1)*		(1)*		2
66~70					
71~75	(1)*		1	1	3
76~80					
81~85	1	1	1		3
86~90	2	1	1		4
91~95	3				3
96~현재	5	2			7
기타(학위취득연도불명)	2**		1**		3
합계	15	4	5	1	25

* 학위미취득자의 경우로서, 최종학력수료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 연구자의 이력상 1990년도 이후로 추정가능.

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연령별로는 14명 중 11명을 차지하는 40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표 4〉 참조). 이 시기에 일본학위취득자의 비중이 급증한 것은 역시 국제적으로 더욱 비중이 커진 일본의 존재를 배경으로 '선진학문습득지'로서의 이미지 증대 및 국제화의 일환으로 전개된 '유학생 10만명 수용계획' 등 일본측의 '흡인요인', 그리고 사회학 분야의

해외유학 경우 전통적인 대미의존도의 상대화 및 여타 사회과학분야에 비해 지체된 일본연구의 필요성, 지역연구의 발전전망 등 국내의 '배출요인'이 결합된 효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큰 단절없이 일정하게 박사학위취득자가 배출되었다. 일단 조사자료상으로는 학계 전반

의 동향 및 일본취득자의 경우와 달리 1990년대에 배출된 연구자보다 1980년대에 배출된 연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사례 수가 많지 않으며 누락자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일본의 경제대국화를 배경으로 'Japan as NO.1.' (E. Vogel)이 구가 되고 국제무역마찰이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었던 반면, 199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일본패리기, 일본우회'의 분위기로 반전된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학계에서는 일본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부전공은 아니더라도 일본사회연구가 관심분야로 삼는 일정한 수의 연구자들이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자료상 1970년대 전반에 1건을 기록한 후 전무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다시 1건이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 또 최초의 1건의 경우 일본연구가 주전공이 아님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는 국내의 일본사회연구가 불모지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상당기간 연구의 현실적 수요나 재생산기반 모두 부재하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1건의 비중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일과적·우연적 사례가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연구의 흐름이 개시된 효과 속에서 미약하나마 국내재생산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기존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누락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박사학위취득을 준비중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범위를 넓혀 전망한다면 국내 취득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II. 일본사회연구내용의 동향

여기서는 일본사회연구자 앙케이트조사에 기재된 연구논문, 저서 및 일본사회연구논문목록⁹⁾을 통해 대략적인 연구내용과 동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먼저 앙케이트조사 응답자들의 관심영역을 필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정리해보면 <표 6>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1인당 복수의 연구분야를 표기한 경우 복수로 분류했기 때문에 중첩되는 연구분야의 연구자 수는 늘어나게 되고 이는 동시에 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 결과 <노동·산업·발전>분야가 수위를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도 노동이 다수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사상·문화·종교> 분야, <지역·커뮤니티> 분야, <가족·젠더(Gender)> 분야, <사회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치사회학> 분야가 3명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사>, <사회운동>, <농촌사회학> 등의 분야가 뒤를 잇는다. 많지 않은 수의 박사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일본사회연구의 주제별 분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및 단행본을 대상으로 작성된 일본사회연구 목록의 경우에는 위의 연구자 응답자료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연구집중정도 등을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다만 이 목록은 교육분야와 혼재되어 수집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제

<표 6> 전공분야별 연구자¹⁰⁾

분 야	관련연구자
노동·산업·발전	7
사상·문화·종교	5
지역·커뮤니티	4
가족·젠더(Gender)	4
사회복지·사회정책	3
정치사회학	3
일본사회사	2
생활세계·사회운동	2
문학사회학	2
농촌사회학	1
커뮤니케이션	1
기타*	4

*기타는 커뮤니케이션, 재해관리, 군사, 소수자, 고대사 연구 등.

8) 누락자를 포함하면 최소한 3~5명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은 조만간 데이터베이스에 보완될 것으로 본다.

9) 일본연구자료센터에서 수집한 것으로서 "한국의 일본연구 2000"에 실릴 예정임.

10) 위의 경우 사회학 관련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사상문화종교> 및 <문학사회학>의 경우, 문화인류학 및 종래의 일문학 연구자까지 대상을 넓힌다면 그 수는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또 복수분류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총합은 38명으로 집계되었다.

외한 사회분야의 수집 정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¹¹⁾ 즉 <사회/교육>분야의 논문은 약 300편인데, 이 중 교육관계 논문(130여 편) 및 사회학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내용들(법, 행정, 정책분야의 논문) 및 기타 부적절하게 분류에 포함된 사례를 제외하고 남는 것은 약 130편으로서, 총 편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 중 다시 <사회복지·사회정책> 및 <매스컴·미디어> 분야 등 기존 국내의 분과학문 구도상 사회학의 인접분야에 해당하는 성과를 별도로 정리한다면 100편을 밑돌게 된다.¹²⁾ 이러한 수치는 여타 사회과학분야에 비해 사회학에서의 일본연구 축적량이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지역연구 착수되기 이전의 단계에 일본사회연구의 전통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 그 이후에도 여타 분야에 비해서 전문적인 일본사회연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게다가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를 감안한다면 이를 일본사회연구자들의 활동부족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상의 제약요인들을 고려한다면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질적으로 발전된 연구성과들이 배출되었으며,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집중된 연구역량의 투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분야별 분포는 연구자의 경우보다 좀 더 주제를 세분화하여 <표 7>, <표 8>로 정리하였다.

우선 비중이 높은 분야를 살펴보면 <표 7>에 나타듯 <노동>(24편), <지역사회·커뮤니티>(14편), <시민사회·사회운동 등>(11편)이 논문 편수 10편 이상으로 전체 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상 상당한 연구집중분야임을 보여준다. <노동> 분야는 경제학 전공자

들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은 노동조합, 노동운동, 노동문제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며 노동부문의 경제적 순기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사회관계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사회집단 및 역학관계에 대한 관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배경에는 국내에서 1970~80년대에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었던 점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고령화, '회사인간'의 문제 등 '일본시스템'의 위기/재편과 관련된 주제들도 발견되는데 일본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가 전망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커뮤니티>의 경우, 정내회(町内會) 등 지역주민조직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크다. 이는 단지 부분적인 지역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기초말단적 질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의의를 지니며 또 일본사회 전체를 다각도에서 이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부분은 일군의 일본사회·문화연구자들의 협동작업에 의해 집중적으로 추진된 사례도 있는 등, 상대적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된 분야이며, 또 종합적이기 때문에 산만해질 수도 있는 사회연구의 문제를 보완하는 사례도 될 것이다. <시민사회·사회운동>분야 역시 총 11편의 경우 1편을 제외하면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많은 관심이 투여되었다. 일본사회학의 흐름에서 본다면 사회운동연구는 그 이전의 시기에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일본사회연구에서는 근래에도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기의 전환기에 전세계적으로 제기된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 1990년대 들어 '폐색상황'을 맞은 일본시스템의 문제점과 변화의 동력

11) 특히 사회 분야의 경우 여타 분야와 비교하면 연구동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한국의 일본연구 2000'에 게재될 예정인 데이터베이스에는 정치/외교분야의 논문이 약 700편 이상, 단행본이 100여 권, 경제/경영분야의 논문이 약 600편 이상, 단행본 250여 권이 올라 있는데 비해 사회 분야는 교육분야와 합하여 논문 약 300편, 단행본 100권 정도이다. 수집능력과 방법의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회적 작업을 통해 완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추가보완작업이 기대된다.

12) 여기에는 정치학, 경제학 및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분류상 일부 중첩되어 포함되어있다. 한편 단행본 약 100권의 경우, 노사관계, 사회복지, 교육, 정치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및 중복된 번역서가 포함된 수치이다(<표 8> 참조). 이 중 기본적인 사회학 서적으로 분류가능한 문헌은 약 10권, 노사관계 및 복지를 포함시킬 경우 그것의 약 2배 정도의 분량이 되며, 노사관계 및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에 교육 분야를 합치면 30여 권 정도가 된다. 그 밖에 문화인류학 및 민속학으로 분류가능(中根千枝의 저작 등 다수의 번역서 포함)한 것들이고, 그 나머지는 일본의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개괄적 논의, 이른바 '일본문화론'에 속하는 것으로 학술적인 성격의 것에서 '대중소비재'의 성격이 강한 것까지 망라되어 있다.

〈표 7〉 분야별 논문편수

연구분야	논문편수
A. 사회학 1	
〈노동〉	24편
〈지역사회·커뮤니티〉	14편
〈시민사회·사회운동 등〉	11편
〈가족·보육·젠더(Gender)〉	9편
〈발전론〉	7편
〈사회개발·사회교육〉	8편
〈사회사상·이론〉	8편
〈소수자(minority)〉	6편
〈정치〉	5편
〈사회사〉	4편
〈산업·경영〉	4편
〈종교〉	4편
〈계층·계급〉	3편
〈도시〉	3편
〈농촌〉	2편
〈일본사회론〉	2편
〈정보〉	2편
〈민속·문화〉 1편	
B. 사회학 2	
〈사회복지·사회정책 등〉	27편
〈매스컴·미디어 등〉	16편
〈한일관계·비교 등〉	9편
C. 교육(134편)	
〈교육 기타〉	83편
〈교과서·교육내용분석 등〉	34편
〈역사인식〉	10편
〈대학교육·개혁 등〉	8편
D. 기타(34편)	
〈법〉	7편
〈주택·토지정책 등〉	9편
〈범죄〉 --	7편
〈관광〉	6편
〈환경〉	4편
〈행정〉	2편

을 찾으려는 문제의식, 일본사회운동의 '일본적 특성'에 대한 관심, 또 국내의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의 연계,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증대현상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보육·젠더(Gender)〉(9편)도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근래에는 전통적인 가족제도 연구 등 외에 사회적 성 역

〈표 8〉 분야별 단행본 권수

연구분야	권수
〈노동〉	15권
〈일본문화론 등〉	13권
〈사회복지·사회정책〉	4권
〈사회 일반〉	3권
〈농촌〉	4권
〈시민사회·사회운동〉	2권
〈가족〉	2권
〈지역·지방〉	1권
〈문화·민속〉	1권
〈주택·주거〉	1권
〈사회교육〉	1권
〈사회사·역사사회학〉	1권
〈사상·이론〉	1권
〈한일관계〉	1권
〈교육〉	10권
〈기타〉	6권
〈번역서〉	35권

할과 관련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지위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이 유사성을 많이 갖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 분야와 중첩되었지만 여성노동 및 고용문제 등도 관심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사회학의 인접분야 중에서 〈사회복지·사회정책 등〉(27편), 〈매스컴·미디어 등〉(16편)의 비중도 매우 높다. 현대사회시스템 운용의 필요성, 정책수립의 면에서도 이들 분야의 연구는 본래적인 사회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연구성과들이 발견된다. 특히 국내복지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서구 복지국가와는 현격히 다른 조건도 있어 일본의 사례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매스컴 분야에서도 신문·방송제도운용에 대한 관심, 신기술도입의 효과 및 위성방송 월경(Spill over)의 문제 등에 관하여 1980년대 이래 일본매스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분야는 현실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연구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류결과를 참조하면서 필자의 관점에서 일본사회연구의 대략적인 경향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화론에서 사회과학으로

일본사회에 대한 갖가지 문화론적 접근은 학문적 논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의 지역연구 본격화 단계 이전부터 존재했던 흐름으로 대개 유형화·단순화의 방법을 통해 일본사회문화현상을 정리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용이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대개 과잉일반화의 위험을 동반하기 쉬우며, 또 전통사회와 달리 사회변동이 극심하고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는 어울리지 않게 해당사회를 단일하고 고정된 구성물인 것으로 묘사하게 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연구 역시 문화유형적 이해의 수준에서 나아가 구조·제도·정책에 대한 역동적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 '단일성의 신화'에서 벗어나 세대·연령·성(性)·계층·지역 등등 사회학적 변수를 도입하여 접근하면서 해당사회 내의 이질적이고 불균등한 면모까지 포착하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역시 '대중소비제'의 비중이 높은 단행본의 경우에는 '일본문화론'에 속하는 작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근래에도 재생산되고 있지만,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결코 높지 않다. 이는 근래의 연구조류가 단순하고 초보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에 보다 걸맞게 심화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의 축적과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일반의 일본이해수준도 한단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2) 실용적 연구에서 독자적 지역연구로

사회과학적 연구는 항상 '현실적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목전의 실용성만을 요구할 경우 관심영역이 좁아지고 대상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제한되기 쉽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사회연구는 정치나 경제분야에 비해 선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존재한 것은 문화론적 접근을 별도로 하면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현존시스템의 순기능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실용적 연구의 흐름이었다. 즉 노사관계의 경우라면 '일본적 협조주의', 평화적인 '춘투', 혹은 '춘투'의 약화·소멸 등

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대상의 어느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종종 도식적인 한일비교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은 사회분야와 함께 수집된 교육분야를 보아도 드러난다. 전체 교육관계논문 중 <교과서, 교육내용분석>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 일본의 도덕교육 연구, 혹은 도덕과목의 한일비교가 적지않은 수에 이르는 것이 그 예이다. 그 근처에는 현존시스템에의 '순응'을 일본(인)의 주요특징으로 보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¹³⁾ 아마도 '발전론적 시각'에서 일본을 주요사례로 다룬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학술적 지역연구단계를 나아가기까지 일정한 매개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보면 실용적·도식적 경향은 대폭 약화된다. <노동>의 경우 노동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거나 혹은 '일 중독'현상에 접근하는 등 오히려 노동층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도 많으며, 한일비교 역시 단순화된 문화비교 등을 넘어 <시민사회>의 비교 등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유니크한 영역이 관심영역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즉 특정목적보다는 해당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독자적 지역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다양한 관심영역으로의 확대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연구 본격화 이전의 일본사회연구는 '일본문화론'적 접근을 제외하면 '발전론적 관점'에서의 관심이 중심적이었다. 즉 급속한 근대화과 세계체제의 중심부에 진입한 '비결'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사회학의 일반이론의 차원에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컸으며 직접적인 지역연구의 성격은 약했다. 그 이외에 경제학의 연구와 중첩되는 <산업·경영>분야의 연구, 또 일문학 소속 연구자들과 중첩되는 <민속·문화>, <종교>분야의 연구가 있었고, <농촌>, <일본사회론>, <사회사상·이론> 등의 분야도 상대적으로 선행업적을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분야에 속한다. 또 <사회사>적인 연구의 흐름도 들 수 있다.¹⁴⁾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관심분야는 훨씬 넓어

13) 아마도 근년의 '이지메'나 '학급붕괴' 현상 등은 이러한 통념을 상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저서, 위에 언급한 분야들 외에도 <사회개발·사회교육>, <정치>, <도시>, <소수자(minority)><계층·계급>, <정보>, <지역·시민운동>, <여성·가족> 등으로 다양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학 본래의 종합적 성격에 걸맞게 해당사회를 이해하려는 활동이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활성화되고 있는 증거이며, 일본사회의 다기성과 동학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III. 일본사회연구의 전망과 과제

한국의 일본사회연구는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연구자의 수 면에서도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 한층의 발전을 위한 희망사항을 덧붙이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1) 다양화와 내면의 탐구

일본사회 연구분야는 예전에 비해 매우 다양해졌다. 하지만 사회학의 광활한 영역에 비추어 기존 연구분야를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개척될 영역도 많다. 가령 <청소년>, <고령자>, <일탈과 범죄> 등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 <소수자>의 경우에도 재일교포 관련연구가 다수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본사회의 이해를 위해서는 <부락민> 및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더욱 넓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사회 내부로 더욱 깊게 들어가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난점이 많겠지만 구조,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의식구조>와 <정신세계>를 포함한 '생활세계'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도 요청된다. 가령 최근의 일본대중문화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일시적 붐으로 그칠지는 미지수이나, 일단은 해당사회의 뼈대뿐 아니라 피와 살까지도 알고 싶다는 대중적 욕구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은 단순이해, 호기심 충족의 차원의 '대중소비재'적 인식을 넘어선 내용으로 응답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전통적인 한일비교, 교류의 영역에서도 급증하는 상호접촉의 결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유의미한 내면적 변화가 있는지 등 더 한층 진전된 이해가 필요하겠

(2) 체계적인 교육조건의 정비

기존의 일본사회연구자들은 대부분 사회학 전공에서 출발하여 일본사회연구를 주전공으로 하는 경로를 밟았다. 하지만 앞으로 후속세대의 경우에는 일본학 혹은 지역학이라는 틀로부터 사회연구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 경우 일본어의 구사능력 및 전반적인 교양과 지식 등 지역연구의 기초가 강화되는 반면, 기존의 사회학 전공자에 비해 이론 및 방법론의 습득 및 활용정도, 또 사회학 연구자로서의 정체감의 면에서 취약성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사회학은 그 대상과 방법면에서 종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점이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교육훈련과정이 결여될 경우 자칫 산만한 이해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일본사회연구의 체계적인 교육자료개발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국내의 관련문헌은, 단순화하여 이야기한다면 개별연구자의 전문적 업적 및 대중소비재적 소개서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여타 분과학문에 비해 사회분야가 이런 성격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연구성과의 축적 및 보급, 용이한 활용을 위해 기존성과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긴요하다. 이 글에서 참고로 삼은 자료 역시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 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법개발 및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분야는 정치, 경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심한 정리작업이 요구된다. 교육과 자료활용의 조건이 체계적으로 정비될수록 국내 일본사회연구의 재생산은 활력을 떨 것이며 후속세대에게 더욱 수준높은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문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schpark@sias.snu.ac.kr
Homepage <http://sias.snu.ac.kr/japan/>

14) 여기서는 특별한 주제가 아닌 이상 일제시대를 다룬 것은 사회사로 분류하였다.